

西獨 大學의 理念과 現實

—大學의 自律性을 中心으로—

Ulrich Herrmann
(Tübingen 大學 教授)

◇이 글은 2月 3日 本協議會가 主擧한 西
◇獨 Tübingen 大學校 教授 Ulrich Herr-
◇mann 博士 招請學術發表會의 發表內容
◇을 同大學에 修學하여 博士學位를 取得
◇한 延世大 吳麟鐸 教授가 번역한 것입
◇니다. 同學術모임에 參與하지 못한 분
◇들께서 參考하시도록 여기에 掲載합니
◇다. ……………<編輯者 註>◇

I.

친애하는 동료 교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는 특별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구성한 이 협의회는 이제 갖 태어났으며, 따라서 일을 막 시작하고 있는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다른 국가의 대학들의 경험으로부터 유익함을 추구하는 일은 보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먼저 저의 대학행정과 대학계획의 경험이 여러분이 오랜 세월동안 축적한 대학경영과 행정의 경험에는 도무지 필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저의 대학경험들의 영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튀빙겐대학교 총장의 비서로 대학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후 수년 동안 튀빙겐대학교의 평의회(Senat) 회원으로, 그리고 관리위원회(Verwaltungsrat) 위원으로 일하였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사회과학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6개의 큰 학과와 40명의 정교수, 60명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 그리고 약 5,0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튀빙겐대학교의 가장 큰 대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또한 대학발전계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역시 일하였습니다. 얼마전부터 저는 교육과학부의 부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특히 예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976년 이래로 저는 독일학술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와 폭스바겐재단(Stiftung Volkswagenwerk)에서 교육학 분야의 연구프로젝트 심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튀빙겐대학교에서 1975년부터 교육사학(Historische Pädagogik) 정교수로 있으며, 이것이 저의 주업입니다.

II.

따라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제목: “대학의 자율성—이상과 현실”에 관하여 말할때 이 주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과학(Wissenschaft)과 예술,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라고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선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연구와 교수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헌법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실제로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어떤 조건들이 대학에게 어떤 자유들을 가능하게 하여주고 있는가?

대학의 자유는 대학에서의, 그리고 대학을 위한 자유의 강조 또는 조장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안에서의 대학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고 이에 관심을 돌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과학적이요, 기술적인 문명사회로서 연구로부터 나오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과학적, 기술공학적 생존형식에만 의존할 뿐 아니라, 다른 대안적인 생존가능성에 대한 과학비판적 반응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과학의 기관인 대학은 따라서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안에서 대학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자유롭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야 대학은 특수한 사회적인 관심과 행정적이거나 정치적인 관심과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관심의 충족이 대학의 직접적인 의무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자유”—대학의 “자율”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원초적으로 의미합니다: 자아결정, 독자적인 법제정의 권리, 스스로 결정한 법적규범에 따라서 대학 자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형성하는 일, 자신의 고유한 합법성에 따라서 연구하고 교수하며 전공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이라는 제도의 형성등등. 대학이 자체의 정관을 스스로 규정하는 자율성과 자율행정의 무제한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독자적인 책임으로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와 교수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대학자체의 고유한 학문적 시민권(Akademisches Bürgerrecht)을 향유하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자율이 대학의 경제적 독자성에 있어서도 역시 보장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 대학은 자율적이었던 것입니다. 환언하면, 대학은 자족(Autarkie)에 근거하여 자율(Autonomie)을 누려왔습니다.

이와같은 특징들을 지녔던 서구의 근세 초기에서부터 현대 초기까지의 즉,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옛”대학은 독일에서 자율이었으며 자족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당시에 주어진 특

권들이 대학을 그렇게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법인(Korporation)이었고, 조합(Genossenschaft)이었으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통일체”였습니다. 대학은 자신의 대학사무들을 그들의 고유한 책임하에 처리하였습니다. 대학은 자족적이었으므로 자율적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지방군주의 재정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자체의 소유와 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과 기부금과 등록금으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18세기의 경제적인 위기들과 불만서혁명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국가영역의 재조정들이 “옛”대학들의 경제적인 기초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대학의 모습은 서구에서 19세기 초부터 사라졌으며, 1794년의 프러시아 일반지방법이 그렇게 표현하였듯이, 대학은 “국가의 시설”로서 일반적인 행정의 프로세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의 과정은 현대 국가가 국가의 특수한 국가형태를 갖추게 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와 그의 동시대인에 의하여 19세기 초에 이루어진 대학의 개혁은 국가가 대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을 당위로하는 새롭게 조직된 대학내에서의 연구와 교수의 자아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대학은 동시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법인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Institution)요, 시설(Anstalt)이며 발전하는 문화행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대학개혁의 한계였으며, 오늘날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쟁점인 것입니다.

국가는 말하자면 “대학”이라는 제도를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논리적으로 “과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국가는 대학에 과학의 자유와 자치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대학은 이와같은 자유를 그들 자체의 고유한 권리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과학의 자율(Autonomie der Wissenschaft)은 제도의 타율(Heteronomie der Institution)이라는 불가피한 대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학들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학”

의 생산력이 기술문명사회의 주도적인 힘과 기초가 되어버렸다는 점과, 그리고 고등교육에의 권리가 민주주의적인 성취시대의 포기 불가능한 자명성이 되어 버린 점에서 대학은 점점 더 강하게 국가적인 통제와 계획의 조치 아래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학문제는 정치적 대결들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학은 최상급의 정치영역으로 화하였읍니다. 이제 시민들은 대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며, 대학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고, 모든 이해타산의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속으로 포함되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즉, 투자한 만큼 효용가치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프러시아에서 훔볼트에 의하여 주장되고 그 “모델 대학교”로서 베를린 대학교의 설립으로 실현되어진 “새로운 대학”의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은 비록 국가적인 시설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전문직업교육과 함께 학생들 자신의 도야와 과학의 기초적 연구, 자유로운 사색의 지도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중심은 철학이었으며,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이론적 접근이었읍니다. 물론 이론은 직업에서의 실천적인 능력의 계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대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세 가지 긴장으로 가득찬 요인들에 의하여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a. 대학이라는 제도는 국가시설이며 동시에 자치적인 조합이다.

b. 대학은 다수의, 부분적으로는 상호 모순적인 과제들을 갖고 있다; 양성(Ausbildung)과 도야(Bildung), 연구(Forschung)와 교수(Lehre).

c. 대학은 학문적으로 자유로와야 하지만 대학의 기능에 있어서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필요와 동열선상에 있어야 한다.

(2) 이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다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a.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적 자유, 환언하면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신뿐만 아니라, 과학과 정치의 분리

b. 교수의 초빙과 교수내용의 확정에 대한 대학교수진의 자체결정

c.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훔볼트가 표현한 바와 같이 “고독”(Einsamkeit)과 “자유” 즉, 여가와 면학에 있어서의 독자성, 전공학과와 과목들의 자유로운 선택, 학생고유의 비판적인 사고형성에 대한 비통제. 그 이유는 다시한번 반복하자면, 대학은 우선적으로 도야(Bildung)의 기관이어야 하며, 졸업후의 직업을 위한 전문지식의 획득을 목적하는 고등직업학교 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 그와 같은 대학은 자연과학들과 기술의 시대 이전, 즉 과학과 경제와 기술의 긴밀한 연관 이전의 시대에, 한마디로 과학과 정치의 분리의 기초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였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은 대학의 자명성에 있어서 소수의 귀족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최상위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와 대학에서 행정과 사법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점유하여야만 하는 소수의 성장세대를 위한 도야의 기관이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기초는 이미 대학의 경제적 자족은 아니었으며, 도야와 소유, 비판과 충성의 연결을 통하여 특징지어지는 그와같은 엘리트 지배자의 양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사회정치적 관심이었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비판과 충성”이라는 표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 당시와 오늘의 독일과 기타 서구국가들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와 행정, 문화와 과학은 변천, 변화, 새로운 문제상황에의 적응과 새로운 예기하지 못한 사태의 극복을 통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통과 전승을 고수하고자 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들을 초래하여 왔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비판과 개혁은 “적응을 통한 변천”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판능력, 기존사실의 비판적 분석, 가능성들에 대한 형안, 미래의 필연성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학을 실현하게 된 것은 19세기의 독일이 이론 과학정책과 사회정책의 위대한 업적에 속합니다. 대학은 독일의 정신적, 과학적,

기술적 부흥의 기초였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로의 전환기에 독일의 과학조직(Wissenschaftssystem)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와같은 대학의 제도적인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각하면 지극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전국적인 행정의 정점에는 대학의 확장에 함께 참여한 대학교수가 자리잡고 있었고, 대학의 정점에는 총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대단히 소수만의 행정관들이 예외적으로 정점을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요한 문제는 평의회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수들의 세계는 작았고 개관이 가능하였으며, 서로를 익히 이해하였습니다. 대학 자체는 도서관과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세기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연구건물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연과학적 기초연구는 대학들과 나란히 빌헬름-황제-재단(Kaiser-Wilhelm-Gesellschaft, 오늘의 Max-Planck-Gesellschaft)에 설치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은 언제나 공공적 성격을 띤 병원이었습니다.

III.

이러한 대학의 내적, 외적 자율성은 언제나 위태로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와 정부와 의회에 의하여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 대학 역사의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언급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 정부의 정치적 입장들과 일치하지 않은 정치적 견해를 갖고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규제되거나 대학에서 제거되었을 경우에,

※ 시험에 관한 규정들과 학사일정에 관한 내용들이 간섭을 받았을 때,

※ 제도화된 비판적 반성으로서의 과학과 지배정당 또는 집단에게 기회라고 여겨지는 과학들간에 사회에 대한 과학의 책임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권리가 학자들로부터 박탈되었을 경우,

대학의 자치와 독자적 발전의 가능성들은 최근에 와서는 전혀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문제시

되어졌습니다.

(1) 모든 능력있는자와 관심있는 자들에게 대학이 개방됨을 통하여 이러한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은 사회정의의 기본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대학들로 하여금 희망없는 만원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교수영역의 재정부담이 증가됨으로써 연구의 부진을 초래하였습니다.

(2) 대학들의 사회적 개방을 통하여 대학인들은 이전의 사회적 동질성과 사회적 내지 정치적 엘리트로서의 성격을 지양하였으며, 언제나 확장 일로에 있는 행정을 통한 정부와 의회의 대학제도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률과 행정지침들은 더욱 더 자세하여졌으며, 대학의 자체행정은 더욱 더 축소되어졌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자연과학과 기술공학 연구실, 그리고 연구소들의 폭증하는 재정적 부담을 통하여, 놀랍게 증가하는 재정소모를 초래한 의학,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공학의 영역들은 중간기간적인 재정계획과 전혀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과학의 독자적 운영과 형성에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전과 창의성의 저해를 가져오는 이러한 모순들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절위원회와 계획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우연, 임의 그리고 제도적 강요를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험한 발전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결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다시금 보다 높은 계획과 조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현실만이 분명해졌습니다. 과학, 연구 그리고 교육은 이러한 발전과정들 통하여 개선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돈과 인력의 집중, 이에 적절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큰 연구프로젝트들은 제외하더라도 연구와 과학발전은 계획 불가능한 과학적 창의성이라는 전혀 다른 순서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를 우리는 일본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은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한된 영역들에서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1) 대학의 동의없이 어떤 교수도 임명되어선 안된다.

(2) 대학의 총장, 학장, 과장들에 대한 자율적인 선출

(3) 대학의 주체적인 그리고 의부간섭과 통제가 없는 석사, 박사학위의 수여와 대학교수자격 수여

(4) 주어진 가능조건의 배두리 안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계속연구를 위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세금부담이 없이 독자적으로 재정집행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율도 과학과 연구의 발전과정이 독창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것입니다. 行政府處들과 부처들의 財政局課, 그리고 計劃局課들에 의하여 자주 시의(猜疑)있는 눈총을 받게되는 대학의 자율은 아직까지는 한 사회가 그 자체의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의 수행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 사회의 성취능력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IV.

이상의 논의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1) 지나치게 관리되고, 어떤 지침에 의하여 제한되어진 과학과 대학은 불만과 체념으로 가득차 있다. 창조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학자가 될 수 있는 수재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

대학조직은 부분적으로 대단히 값비싼 그리고 대단히 힘들게 보수가능한 공전(空轉)으로 빠져 버릴 것이다.

(2) 그 반대의 경우도 타당하다; 전적으로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져있는 대학은 오늘날 대학에 부여되어 있는 과제들과 문제들을 충분한 계획과 관리가 없이는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절대적 자율”은 무질서(Chaos)를 초래한다.

(3) 따라서 중간적인 길만이 남아있다.

한편으로 대학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되고, 대학내적 의지형성의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부처와 관리들에 대한 균형세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서독총장회의(Westdeutsche Rektorenkonferenz)가 연방국가들의 총장회의들과 함께 어느 정도로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외에도 과학의 독자적인 기구들로서 과학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막스-플랑크-재단(Max-Planck-Gesellschaft)과 독일학술연구재단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이 영향력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공서와의 공동작업에 있어서 상호 신뢰의 길들이 발견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상호 신뢰는 관공서가 과학과 연구의 특수한 생활조건들과 발전조건들을 존중하고 장려하도록 하여줄 것입니다. 어려움은 과학과 연구가 다중적으로 “숨겨진 상태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과학과 연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서서히 보다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경영하면서 강연과 전시를 통하여 대학 외부에서 대학의 무게를 선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제 거대한 기업들로 화하였으며, 19세기의 목가적인 시대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과 연구는 오늘날 정치와 사회경제와 관리간에 불가피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과학과 연구가 계속하여 그들의 과제를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과학과 연구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후견(後見)(Ideologische und Politische Bevormundung)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앞으로 많은 성과있는 업적을 이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